흑색연필만 허용, 단추엔 스티커… AI 부정행위 대책 '분주'

수능 D-DAY

휴대금지 필기구 시험장서 일괄지급
옷 단추에 부착할 스티커 함께 배부
새 안경 맞추는 등 수험생 '부담'
논술고사도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8일 N수생(졸업생·검정고시생)수험표 배부 장소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북중학교 체육관에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영상물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인공지능(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학교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수험생들은 안경을 새로 맞추거나 단추 없는 옷을 고르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고, 교육부가 개인 필기구 휴대까지 제한하면서 시험장 운영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수능 직후 논술·면접을 치르는 대학들 역시 감독 인력을 늘리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부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범정부 차원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8일에도 수험생의 시험장 반입 가능 물품을 추가로 제한했다.

수험생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도 개인 휴대가 가능했지만,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제외했다. 교육부는 이날 휴대가 금지된 필기구를 구매해 각 시도로 배송했다. 필기구는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하며, 변경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모든 수험생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침에 따라 시험장 준비에 들어갔다. 교육청 관계자는 "옷에 단추가 있는 수험생에게는 1교시 전 필기구를 배부할 때 스티커를 함께 나눠주고, 수험생이 직접 부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티커가 떨어지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하지 않고, 감독관이 다시 지급해 부착하도록 안내한다"고 전했다. 추가 배치되는 복도 감독관은 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직원들로 구성하고, 이날 오후 화상 연수를 진행했다.

후속 지침이 잇따르며 수험생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일반 안경이 스마트안경으로 오인돼 불필요한 검사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평소 쓰던 안경까지 바꾸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험생 강모(18) 군도 안경을 새로 맞췄다. 강 군은 "평소 쓰던 안경이 AI 스마트안경과 외형이 비슷하다는 말에 불필요한 의심을 피하려고 안경부터 다시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여러 대책을 쏟아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며 "시험 자체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수능 직후부터 일정이 이어지는 대학별 고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오는 21일 수능 이후 가장 먼저 논술고사를 치르는 고려대는 자체 AI 부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통신·촬영용 초소형 기기의 반입과 소지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불합격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독 인력 규모와 구체적인 단속 기준, 전파·금속탐지기 도입 여부 등은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대학 측은 전형의 충분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적정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논술전형에서 5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삼육대도 오는 23일 논술고사를 앞두고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삼육대 관계자는 "정규 감독관 외에 고사실마다 AI 부정행위 전담 감독관 2명을 추가 배치해 고사 기간 부정행위 여부만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라며 "고사장 건물 출입 시 금속탐지기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기구와 물병, 시계, 모자 등 개인 물품의 사용과 착용도 금지하고, 대학에서 지급하는 필기구만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 차원의 제재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197개 회원대학과 AI·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입시 부정행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수능에서 AI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 등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최대 10년간 해당 대학뿐 아니라 다른 회원대학에도 입학할 수 없도록 법령과 학칙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서 같은 유형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도 동일한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7학년도 수능은 19일 전국 85개 시험지구·1312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 응시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수험생들을 18일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과 유의 사항을 확인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당정, AI 커닝 때 '수능 10년 응시제한' 법 개정 추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감독인력 약 8400명 추가 배치
부정행위자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빅테크 정보 제출 의무화 검토도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당정이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감독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안경 등을 전수조사 하는 등 부정행위 사전 예방 대책과 동시에, 적발 시 응시자격 박탈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고소·고발 등 사후 처벌에도 강력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수능 당일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부정행위와 관련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수험장 반입에 대비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가방을 수험장 밖 복도에 보관하고 감독인력 약 8400명을 추가로 배치해 시험장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긴급재난문자를 활용해 미제출 스마트폰을 탐지하고,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 공조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과 사후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제도를 개선해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당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시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대학 재학생이 수능 부정행위를 저질러 적발될 경우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입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형사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부정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선동과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답안 요구 사례를 인공지능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국가 시험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우리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다.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정호 의원이 위원장, 고민정 의원이 간사를 맡는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정보 제출 의무화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 기업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4개사"라고 했다.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자격박탈 제한 등 처벌을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대상을 구체화하면 위헌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검토 중"이라며 "재수생과 반수생이 많은데, 수능 1년 응시제한이 실효성이 없어서 이 학생들 경우 (적발 시) 현재 학교에 돌아가서 다니는 것도 (대학교) 학칙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학칙에 따라서 징계 조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민석 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며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정행위 방지 절차의 일환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모든 국민이 함께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매진해 온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사이버보안 예산 증액한다지만… AI 공격 대비 실효성엔 '의문'

과기정통부, 예산 877억 증액 추진
보안 솔루션 구독 지원 등 예방 초점
고도화하는 사이버 공격 대응엔 글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사이버보안 예산을 약 877억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증액안 대부분이 사전 예방과 피해 지원에 쏠려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8일 〈메트로경제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약 877억원 추가로 늘리는 증액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증액안이 모두 반영되면 내년 민간 분야 정보보호 예산은 6108억원으로 올해(3634억원)보다 1.7배 가까이 늘어난다.

중소기업 보안 지원(500억원), 사이버대피소(109억2000만원), 양자내성암호 전환(100억원), 취약점관리센터(90억9000만원), 침해사고 대응 인프라 개선(60억원), 기반시설 점검(14억원), 취약점 신고포상제(3억원) 7개 사업이 포함된다.

다만 사업 구성을 보면 AI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보안 지원은 AI 보안 솔루션이나 구독료, 보안 장비 도입 등을 돕는 지원 사업에 속한다.

취약점관리센터 역시 보안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 기업에 패치 적용을 지원하는 등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사이버 취약점 신고포상제와 국가정보원이 총괄하는 양자내성암호(PQC) 전환 사업 등을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피해 지원에 집중된 예산이다.

그나마 디도스(DDoS) 공격을 우회시켜 정상 서비스를 유지해주는 사이버대피소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차단하는 사업인데, 이마저도 전체 증액 예산 중 비중이 약 12%에 그친다.

최근 보안업계는 자율형 공격 시스템의 등장으로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취약점을 찾아 스스로 침투 경로를 설계하고 공격까지 실행하면서다.

실제로 최근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GTIG)의 AI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AI 에이전트 군단이 역할 분담을 통해 취약점을 찾고 공격까지 실행하는 사례가 올해 하반기부터 공식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번 예산 증액은 범정부 차원에서 AI 공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보안 솔루션 보급과 취약점 점검만으로는 고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조민선 기자 msjo@